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10(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재정성과관리제도

요 약

-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고성과관리담당관(CPO : Chief Performance Officer)을 백악관에 두고 전 부처의 성과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특히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필요
 - 사업 수혜요건 및 내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 예산액, 집행 및 수혜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취합 및 제공
 - 지역별 현황 자료 및 재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적 집계
 -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 재정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권고 및 시정사항 도출
 -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지방 정부와 각 부처의 내부감사조직과 감사원에서 수행
 - 재정사업관련 낭비 및 부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마련

I.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운영관련 외국 현황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
 - 영국은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s)을 통하여 각 부처가 향후 3년간 제공할 서비스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관리를 함
 - 미국은 정부성과관리법(GPRA)을 통하여 각 부처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부시행정부에서는 재정사업성과평가수단(PART)을 통하여 연방정부 사업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사업 개선책을 권고하였음
 - 오바마 행정부는 최고성과관리담당관(CPO : Chief Performance Officer)을 백악관 내의 OMB(관리예산실)에 신설함으로써 전부처의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예산사업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함
 - 캐나다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중심의 성과관리를 했으나, 최근에는 세출구조조정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고 있음
 - 전략적 리뷰(Strategic Review)를 2007년부터 실행하여, 각 부처의 사업을 4년 주기로 평가하고, 효과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낮은 각 부처 예산의 5%를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II.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성과관리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 및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신속한 확대 및 집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위기의 초기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재정지출의 투명성, 효과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나, 경제위기의 완화에 따라 재정지출의 성과관리 문제가 부각될 것임
-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과 관련된 성과관리의 역할은 다양함
 - 경제활성화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 방식 및 분야를 밝혀냄으로써 재정지출 확대 효과 제고
 - 기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를 활용
 - 확대된 재정사업의 원활한 집행 및 누수 현상 방지
 - 확대된 재정지출의 집행 현황 및 수혜 현황 모니터링
 - 재정집행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관리 및 모니터링 기준 수립
 - 경제위기 해소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 감소
 - 경제위기 대응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중단 추진

4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재정성과관리제도

- 경제활성화를 위해 증액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추진

□ 외국의 재정지출 성과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확대된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투명성·책임성 강화를 도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수혜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재정사업의 예산 집행 및 수혜자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재정집행의 주체인 사업 부처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권고 사항 공개를 통해 책임성 제고
- 재정건전화 추진 수단으로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고 의사결정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신설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최고성과관리담당관(CPO : Chief Performance Officer)을 백악관에 신설함
 - 예산사업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고 최고 의사결정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효과 기대

Ⅲ. 외국의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현황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현황

- **(미국)** 2009년 2월 17일, 350만명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회복을 통한 중산층 강화를 위한 「미국회복·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의회 승인
 - 법률에 포함된 재정지출 규모는 총 7,870억 달러로 GDP대비 약 5.4% 해당, 이중 세출관련 조치가 약 4,990억달러, 감세조치가 약 2,880억 달러 - FY2009~FY2010(2010년 9월까지)중 전체의 약 70%(GDP대비 약 3.8%) 집행
- **(캐나다)** 2007년 10월 30일 경기부양을 위한 650억 달러 규모의 영구적인 세금감면을 시작으로 개인, 가족 및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총 2,22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재정 지출 실시
 - 소비지출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GST 세율 7%에서 5%로 인하 (동 조치의 배경은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인하 단행이었음)
 - 2008-09년도 및 향후 5개년에 걸쳐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개인소득세 경감 조치 실시(2009년 8월 1일부터 실시)
 -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19% 적용,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국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건설사업 등에 198억 달러 지원

- **(호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지원 및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골자로 하는 420억 호주달러 규모의 Nation Building Economic Stimulus Plan 수립
 - 동 계획의 실천을 통해 2008-09 GDP의 0.5% 증가, 2009-10년 GDP의 0.75~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2. 확대된 재정지출에 대한 온라인 정보 공개 현황

- **(미국)** 2009년 2월 「미국회복·재투자법」에 수반한 경기부양 정부지출의 실태와 지출로 인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recovery.gov 개설
 - 기본 토대는 과거 “*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에 의해 개설된 USAspending.gov¹⁾과 유사
 - 전 정부기관은 Recovery.gov에 경비부양 예산의 집행 규모와 현황, 집행처, 집행 방법, 예산사용으로 인해 생성된 일자리 등 모든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함
 - Recovery.gov의 구체적인 제공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각 주정부의 월 단위 예산 및 사업 활동 보고서
 - 예산 사업 수혜자와 결과 보고서
 - 예산사업 계획서(사업대상처, 방법 등)
 - 일자리 창출 현황 및 관련 일자리 정보 사이트 링크
 - 예산의 남용,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 정보
 - 각 주정부의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 정보

1) 동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 1. the name of the entity receiving the award, 2. the amount of the award, 3.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transaction type, funding agency, etc, 4. the location of the entity receiving the award, 5. a unique identifier of the entity receiving the award

- **(캐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대응 사이트 “Economic Action Plan”(http://www.actionplan.gc.ca)구축
 -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수혜자별, 분야별로 구성됨
 - 근로자, 가구, 학생, 노인, 주택 소유자 등 주체별 사업
 - 문화, 제조, 건설, 자연자원 및 농어업, 금융업 등 분야별 사업
 - 대학 지원, 비영리 기관 등 대상별 사업
 - 지방단체, 시 단체, 원주민 사회 등 지역별 사업

- **(호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된 economic stimulus plan의 수혜자별 정책과 동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웹상에서 공개 (http://www.economicstimulusplan.gov.au)
 - economic stimulus plan의 분야별 정책이 소개되고, 동 계획을 통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수혜자 그룹별로 정책정보가 구분되어 제시됨
 - plan 주요 분야 : 교육, 도로·철도, 주택건설, 일자리 등
 - 수혜별 그룹 내역 : 개인, 중소기업, 가족, 자체단체, 주택

- **(한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대응 포털사이트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하부에 개설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 : 금융위기극복포털사이트(fsc.go.kr/roadahead)
 -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 한국 금융시장 안정대책 : 주요정책대응, 정책개요 및 경과
 - 보도자료 및 유관기관자료

 - 기획재정부 : 위기극복포털사이트(mosf.go.kr/recover)
 -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및 관련 정책자료 소개

3. 확대된 재정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 **(미국 내부감사기구)** 주정부는 확대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다음 사업연도 전까지 해결 실적 또는 해결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재무/법정 감사가 실시되며, 일반 회계 법인에 의한 감사, 국방부 조달 감사국의 감사 등도 활용됨
 - 감사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
 - 요구된 사업비의 적절성 및 합리성
 - 적절한 법률 및 연방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 수립된 보조금 사용 계획
 -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
 - 발견된 주요 문제점
 - 'Idaho주의 Rupert시 부정 비용 수급 관련 감사' 사례
 - Rupert시는 배정되지 않은 비용의 선 사용, 보조 대상이 아닌 이자비용 및 장비취득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 증빙 보고서 미 제출하여 총 비용 \$423,106 중 \$63,256를 반납 조치
 - 'New York 주의 사업 관리 감사' 사례
 - 뉴욕주는 물품 조달 사업 감사에서 적절한 자산취득 통제수단, 재고관리수단, 적절한 물품관리수단의 부재 등을 지적받았으며, 관리수단구축 또는 방안 계획을 6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함

- **(미국 감사원)** 「미국회복·재투자법」에 근거해 GAO는 확대된 재정지출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출계획 및 실제 사용 실태를 점검, 검토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함

- 최근 발표된 GAO의 보고서는 16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review의 내용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GAO는 동 review를 위해 주정부 관료 및 주지사, State Auditors, Controllors, and Treasurers를 인터뷰하고, OMB와 여타 연방 부처 (agencies)의 guidance도 참고함
- GAO의 점검 초점은, 연방정부로부터 신규로 지원된 재원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과 재정확대의 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정보의 생산의 적정성에 있음

□ **(호주)** 호주 정부는 Stimulus Plan에 의한 정부지출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월별 보고서 형태로 정보공개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Energy Efficient Homes Package 사업 등 Stimulus plan에 의한 정부지출 사업을 점검하였음
 - The Energy Efficient Homes Package : 에너지 및 탄소 소비를 낮출 수 있는 주택구조개선 사업 및 동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적임.
 -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가구당 1,600 호주달러가 직접 지급되어 37천가구 이상이 태양열 온수 시스템으로 개조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MOU가 체결되어 70명의 추가적인 직원이 채용됨

IV. 개선 방향

□ 확대된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 현행 우리나라에도 『경제위기극복포털』, 『금융위기극복포털』과 같은 온라인 정보 공개 사이트가 있으나, 정보 공개 수준은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외국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혜자 또는 예산사업 감시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 필요
 -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 재정사업 내역, 예산 규모, 집행 현황 등의 공개
 - 지역별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 정보 공개를 통해 확대된 재정지출이 수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히 전달되도록 하며, 일반 국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재정지출의 부적절한 집행과 부정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 마련

□ 확대된 재정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재정집행 주체로서의 사업 부처, 지방 정부 및 기타 조직들의 내부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강화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 확보
 - 재정책대 초기에는 재정지출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경제위기의 완화에 따라 재정집행의 적정성 확보 노력 필요

- 확대된 재정지출 집행의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예산 지출의 내역 추적 및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재정집행 모니터링
 -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 목적을 위해 신규 투입된 예산내역과 집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직제 신설
 - 한시적으로 증가된 재정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경제 안정화 이후에는 재정지출을 종료
- 기존 재정사업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의 경우는 기존 성과관리제도에서 요구하는 성과정보 생산 및 관리를 통해, 향후 세출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경제안정화 이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 총괄기구로서의 최고성과관리담당관을 설치하고 최고의사결정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 수립 검토 필요
 - 경제안정화 이후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재정의 건전성 회복임
 - 재정의 건전성 회복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이루는 것임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다부처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이므로, 권한이 강화된 직제를 신설하여 성과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최고성과관리담당관(CPO)을 2009년 4월 임명

12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재정성과관리제도

- 최고성과관리담당관 신설의 기대 효과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문의처 : [박노욱 연구위원](mailto:npark@kipf.re.kr)(npark@kipf.re.kr, 2186-2267)